

3대 메가프로젝트 발 맞춘다...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속도

교육부, 지방대학 학생 정원 유연화
인재양성 신속트랙제 도입 추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도 연계

교육부가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대학의 학생 정원 제도를 유연화한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해당 지역 대학이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필요한 인력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정부가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분야가 포함된다.

지역협약정원제는 지방대학이 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계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23,064명	9,701명	13,363명	
			인공지능 4,000명	
첨단산업 부트캠프 (전문학사·학사)	7,400명	2,800명	미래차 400명 로봇 200명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학사)	1,100명	950명	로봇 150명	-
반도체공동연구소 연합 교육과정 (학·석·박사)	690명	690명	-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학사)	8,734명	차세대반도체 220명 반도체소부장 1,770명 첨단소재 1,200명	인공지능 350명 미래차 872명 지능형로봇 812명	빅데이터 1,070명 데이터보안 1,240명 차세대통신 1,200명
BK21 (석·박사)	5,140명	지능형반도체 1,005명 첨단소재 1,066명	인공지능 1,345명 / AI+X 388명 지능형로봇 155명	빅데이터 1,181명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에 반도체·AI·데이터센터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 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맞춰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는 전과와 정원 외 편입학을 활용해 지방대학이 2년 안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다. 신입생 정원 조정만으로는 산업계 인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대학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 까지 7년간 AI, 반도체, 소프트웨어·통신

분야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첨단분야 정원 약 7100명을 늘리는 데 지원해 왔다. 이는 순증과 편입학 여섯, 결손 인원 활용 등을 포함한 규모다.

관련 분야 졸업생도 매년 9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졸업생 기준 기계·금속, 소재·재료,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산업공학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계열 졸업생은 9만3646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 졸업생이 5만75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2만2158명, 석사 1만797명, 박사 3114명이었다.

계약학과를 통한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 이목되고 있다. 기업 채용을 전제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재직자 직무 역량을 높이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통해서도 매년 약 2만4000명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계약학과 재학생은 반도체 분야 3650명, AI 분야 2158명이다.

교육부는 약 1조원 규모의 첨단분야 인

재양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에서는 매년 2만3000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 중이다. 주요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반도체 공동연구소 연합교육과정,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등이다.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도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한다. 지방정부와 대학이 권역별 산업 수요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 투자 기업에 필요한 현장·실무형 인력을 공급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대학이 기업 투자와 연계해 첨단분야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제도를 유연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모아주택 층수 높이고 용적률 확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용적률 최대 500%, 인센티브 확대도 제2종 7층 이하 지역 층수규제 완화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본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에 적용되던 평균 13층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는 취지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 단위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DB

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통합해 주택을 공급하고,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향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입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향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국철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있는 경우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부족했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김원기 의정부시장, LH와 상생협력 시동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방문
주요 공공주택지구 사업 현황 논의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8일 취임 후 첫 유관기관 방문지로 용현산단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찾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관내 주요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LH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김성연 LH 경기지역본부장 등 임직원들과 만나 녹양우정지구, 의정부부림조타운, 용현지구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기관은 시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업 성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김 시장은 의정부에 거주 중인 LH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주 여건과



김원기 의정부시장(가운데)이 LH 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소통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지역생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LH 임직원들이 의정부에 빠르게 정착해 지역 상생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의정부로 이전한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며 용현산단 일대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의정부(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경기도 일자리재단,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15일 이천시 '5070 일자리박람회'
지역 우수기업 30개사 현장면접

경기도와 이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5일 이전 서희청소년센터에서 '2026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중심 채용행사로 운영되며, 우수기업과 50~70세 구직자를 연결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3년째를 맞는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단순한 채용행사를 넘어 중장

년층의 지속 가능한 취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경력 설계 기회를, 기업에는 검증된 실무형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에는 (주)명진로직스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등 지역 우수기업 30개사가 참여해 1대 1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이력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운영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일자리 유관기관 10곳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과 취업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행사장에서는 AI 기반 이력서 작성 지원,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및 미크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채용 상담부터 현장 면접,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의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참여기업의 채용공고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지라는 단순한 고용을 넘어 삶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중장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검증된 경력 인재를 연결하는 상생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는 15~16일 '인천국제해양포럼'

인천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 지식 비즈니스 플랫폼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오는 15일~16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AI 시대, 해양의 미래'를 주제로 삼았다. 인공지능 기술이 해양산업 전반에 가져올 AI 기반 혁신 방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성공관대 최재봉 교수와 현대차·기아 주시현 상무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5개 정규 세션과 1개 특별 세션으로 이어진다.

특히 행사 둘째 날인 16일은 '인천 특화데이'로 지정해 운영한다. 'AI 시대 해양도시 인천'을 주제로 학계·산업계·정책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인천의 AI

기술이 해양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인천이 미래 글로벌 해양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AI 기술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피지컬 AI 전시·체험존'을 대폭 강화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사족보행 로봇과 인간의 보행을 완벽히 재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마트함만 내에서 물류 자동화를 수행하는 고난도 작업을 생생하게 시연한다.

아울러 정밀한 로봇 팔 제어로 정량의 디저트를 제조하는 아이스크림 로봇과 참석자 네임택의 QR코드를 연계한 로봇 커피 서비스 등 참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미래 기술들이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